

민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여성 할당 부활

지도부 9인 체제 의결...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원샷 경선 이달말 대표 3명·최고위 8명 압축...당권 주자들 막판 수싸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회를 열어 오는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당대표(1명)와 최고위원(5명)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의 '순수 집단 지도체제'에서 당 대표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뀌게 됐다.

사·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맡던 권역별 최고위원과 노인·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함께 폐지하기로 했던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는 되살아났다.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5위 남성 대신 여성 최고위원 1명이 당선된다. 아울러 당무위는 새 지도부를 대표 1명,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

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1명 등 9인 체제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대에 앞서 이달 말께 중앙위원회를 열어 예비 경선(컷오프)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당대표 후보자는 3명, 최고위원 후보자는 8명으로 각각 압축된다.

대표·최고위원 선출은 지역을 돌며 투표를 진행하는 순회 경선 대신 전대 당일 한번에 경선을 진행하는 '원샷'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는 대의원 현장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여론조사 15%(국민 10% + 일반당원 5%)가 각각 반영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지도체제 변경 및 경선방식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오는 13

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런 가운데 예비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출마 희망자들은 여전히 눈치작전을 이어가며 막판 수 싸움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호남지역 당원들은 어느 후보가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우선 목표 출신의 전해철 의원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의 원들의 '부당이 모임'이 계파주의 논란으로 번지면서 전 의원의 도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와 김진표(4선)·최재성(4선)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 등이 전 의원의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고흥 출신에 광주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4선의 송영길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당권 도전 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출마를 선

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잠재 주자군에서는 해남 출신의 박광은 의원이 주목되고 있다. 원만한 성품에 개혁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는 이날 오전 출마선언을 하려 했으나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상황을 고려해 선언 시점을 다소 미뤘다.

한편, 민주당은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책위의장 지명 권한을 당 대표에서 원내대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협상과 정책 당정 협의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함으로써 집권여당으로서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표 권한이 줄어들다는 점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도전한 당권 주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 또 러닝메이트 제도가 계파주의나 나눠먹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17일 전국위 개최

이번주 비대위원장 후보 발표...국민공모 101명 추천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에 비상지도체제 윤곽을 그린 뒤 오는 17일 전국위원회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당 전국위원회가 오는 17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며 "10일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0일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추린 뒤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17일 임명 의결권을 가진 전국위의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국위는 비대위원장 임명의 결정을 가진 기구다.

안 위원장은 "전일 마감된 비대위원장 국민공모에 1124명이 참여해 101명의

후보를 추천했다"며 "중복된 부분도 있고, 일부 장난스러운 내용도 없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이 참여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위 차원에서 추천된 150명 가운데 30여분을 이미 추렸고, (국민공모 등으로) 숫자가 많아 후보압축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의 여러 경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듣고, 비대위원의 활동방향을 이야기 한 뒤 추천된 분들과 접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도 "절제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당과 보수의 미래를 밝혀줄 책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어디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당장 달려가 만일 의향이 있다면"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법사위 쟁탈전 ... 원구성 협상 난항

원내대표 회동 민주·한국당 "양보 불가"... 수석 회동도 빈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문제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 등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지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날 원내대표 회동 중 페이스북에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 경제발전기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라면서 "더욱이 그것이 만약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 중에 자당의 법사위원장 요구 등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장에서 고성이나 나오면서 제가 항의했다니 본인이나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협상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를 놓고 대립하면서 바른미래당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각

각 맡되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배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그게 보장되면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내지 '상임위원장 2석'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협상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나머지 교섭단체는 의석 규모에 따라 국회의장단을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대 7대 2대 1'로 나누는 것에 공감하면서 평화당 주장을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거대상임위 정비방안을 추후 논의하면서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배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오후에는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추가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시 법사위원장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실무협상에서는 법사위 제도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면목 없습니다" 9일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마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못 이루고 회의장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평화와정의 장병완. /연합뉴스

바른미래 내달 19일 전대...임기 2년

'의원 특활비 폐지' 당론 의결

바른미래당은 9일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8월19일에 열고 당대표 임기는 21대 총선 공천권을 갖는 2년으로 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수민 원내대표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원내대표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전대 연기 요구에 "의원 대부분이 전대는 8월19일에 마무리 하고 싶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다만 당의 혁신 과제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2주가량 연기하는 데는 동의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인은 "당대표 임기는 대부분의 1년으로 단축하는 데 반대 의견을 냈으며, 기존 당헌당규에 따라 2년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원내외 인사 8-9명으로 꾸려진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대 시기와 당대표 선출 절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인은 '쌈짓돈' 논란이 제기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의원들이 보호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영수증 없는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박주현·이상돈·장정숙에 당원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민주평화당은 9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에 대해 정당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의 권리를 전부 부여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헌 보칙을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최고위원의 결정을 거쳐 당원의 권리 전부나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권, 피선거권 부여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지만, 합당에 반발해 실제로는 평화당에서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 민주평화연구원장, 대변인 등 당직을 맡아 활동해왔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평화당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가건물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 · 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층(1층,상가칸)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7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7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